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용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두세훈 도의원, 도정질문서 “도내 14개 시군 거점터미널보다 노후화 심해 새롭게 조성을”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안주·더불어민주당)이 9일 도정질문에서 “전북의 관문인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제 있다. 이에, 두세훈 의원은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전북도의 교통중심 거점시설의 실태를 지적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시외·고속버스 복합형터미널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들을 비롯한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전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도 제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전북도는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도비 6억 2천만 원가량을 투자했지만, 화장실이나 대합실 개보수 사업으로는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개적으로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모사업 선정 등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실제, 전국 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의 거점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장 오래 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도내 34개 시외버스터미널 중 장수공영터미널(1971년), 군산대야공영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송 지사 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위험천만’ 배달 오토바이의 주행... 교통사고 급증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보호대책 마련돼야”

김종식 도의원, 도정질문서 “자치경찰 관련 부서 첫 업무... 실태조사 필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한 안전 및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배달 시간에 쫓겨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자신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명 ‘전투형’은 물론 AI 배차시스템 등 갑수익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유상운송 보험료, 산재 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종식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안전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실제,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047건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문화 동참해달라”

김대오 도의원, 도정·교육행정 질문 통해 독려

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경복지위·익산1)은 9일 도정 및 교육·화에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등 공직사회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제언했다.



업체의 52.3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들이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제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북도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이 단발성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으로 도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오 의원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함께 동참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의 물꼬를 튼다면, 향후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경찰청, 전북도 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참여 또한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기부에 적극 동참하며, 다양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많은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공동체 정신과 이웃을 배려하는 나눔 정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북교육청 역시 나눔을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 발기인 1만3000여명... 3만명의 회원 가입이 목표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 이름 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글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 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이하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북대학교에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약속’
- 사민당사업 원수
- 탄소섬유 생산지 조성
- 군산 조선소 부활
- 혁신도시 제2금융도시 육성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1만3,000여명이며,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5월 8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5월 29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친 경우, 호남지역내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 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전북일보 대표이사 회장 우석학원 이사장, 전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경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전전북예총회장), 이상열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진봉현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이병관 대자연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등 27명이 맡아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호열 전북도의원, 나기하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 다. /유호상 기자

홍성임 도의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이루어져야”

전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9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홍 의원은 전북도 도정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기록지체의 시대에서 도내에서 기록물의 효율적·안

약 20만권으로, 이는 보존서고의 보유 가능 수량인 약 128만권을 훌쩍 초과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국비 등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유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의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인권보장·증진’ 가장 가치 있는 조례로

이경신 전주시의원, 조례 제·개정안 발의 105건 “막중한 책임감 느껴”

전주시의회 이경신(호재·2·3동)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105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대표 발의 조례안은 24건에 이른다. 이런 조례안 발의 건수는 1년에 회



의 삶과 정서, 자연 친화를 고민하던 끝에 전부 개정하게 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정적 지원과 상호작용으로 도시농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 조례는 그가 발의한 내용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는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과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조선 시절에는 비변재 살아가는 시

의 삶과 정서, 자연 친화를 고민하던 끝에 전부 개정하게 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정적 지원과 상호작용으로 도시농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두 차례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용삼 기자